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5. 12.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8월 22일, 김용선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7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11월 27일)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년 11월 25일)

상정 · 제안설명 · 심사 · 수정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2025년 11월 28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선 의원)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한국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임.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7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남아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이 설치해 놓은 어뢰로 인해 배가 폭발하였고, 약 3,735명의 승선자 중 524명이 숨졌으며, 승선자 명부는 배의 침몰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해 왔음.

그런데, 2014년 승선자가 8천 명이 넘었다는 일본 외무성 문서가 발견되었고, 2016년 우키시마호가 폭탄을 신고 출항했다는 방위청 문서가 확인되면서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음.

또한, 2024년 3월과 5월에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승선인 명부 15종이 공개되었고, 일본 정부가 승선자 명부를 포함한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자료 약 75종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밝

해지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강제동원피해자였고, 당시 일본 해군의 명령에 의한 강제 승선이었던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동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왔음. 이제라도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는 계기로 삼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이용선위원이 대표발의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의 폭침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동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 동북지방 아오모리(靑森)현 오미나토(大湊)에서 강제징용 한국인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귀환하기 위해 출발한 우키시마호(浮島丸, 4730톤)가 8월 24일 17시경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 항 앞바다 300m 지점에서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임.

일본 정부는 1950년 및 1954년 2차례에 걸쳐 선체를 인양하고, 그 과정에서 수습된 유해를 524위로 분골 합장하여 도쿄 유텐지에 보관하였음. 유텐지 보관 유해 중 유족 동의를 얻은 241위를 정부 주도로 3차례¹⁾에 걸쳐 유골 일부를 봉환하였으며, 나머지 유해는 유텐지에 남아 있음²⁾.

사건이 발생한 지 79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키시마호 폭발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진상규명을 포함해 정확한 피해인원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임.

2005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승선자 수, 사망자 수, 침몰 원인 등 생존자 및 전문가, 일본측 의견이 서로 다르고,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한 바 있음.

1) 1971년, 1974년, 1976년

2) 2008년 유해봉환을 추진하였으나, 봉환절차 및 자료공개 미비 등 문제로 유족 반대에 따라 보류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관련 의혹>

쟁점	유족 입장	일본측 입장
승선경위	승선 강요	귀국 희망
침몰원인	일본해군 고의 폭파	연합군 부설 기뢰와 충돌 폭침
사망자	승선규모 6천~8천명 중 3,000명 이상 사망	조선인 3,735명 중 524명(14.0%) 일본해군 승무원 255명 중 25명 사망(9.8%)

자료: 행정안전부

우키시마호 폭침 희생자 유족들은 1992년 일본 법원에 국가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1년 교토지방법판소에서 일본 정부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인에게 1인당 300만엔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청은 기각하였으며,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을 번복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한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한 추모사업은 일본의 시민단체인 ‘우키시마마루 순난자(殉難者)를 추도하는 모임’이 매년 우키시마호 사건 발생일(8.24) 교토부 마이즈루시 우키시마마루 순난자 추도비 앞에서 추모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행정안전부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매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 합동위령제³⁾를 개최하고 있음.

3) 금년 9.5(목) 개최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결의안은 ①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 ② 대한민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③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한일 양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④ 대한민국 정부가 본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 4개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통해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금년 3월, 5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청구⁴⁾로 인해 승선자 명부의 존재 사실이 확인⁵⁾되었고, 일본 정부가 승선자 명부를 포함한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자료 약 70여 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모멘텀이 되고 있으며,

4) 후세 유진 기자(프리랜서)는 2023년 말 우키시마호 사건 취재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승선자 명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바, 금년 3월 및 5월 관련 명부와 공문서가 공개된 바 있음.

5) 상기 정보공개청구 건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신이 5.31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현 시점 명부라고 명명된 자료는 약 70건 가량 존재한다고 답변하면서 명부의 존재가 밝혀짐.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동 결의안의 제안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외교부는 명부의 존재가 밝혀진 이후 일본 정부와 실무차원에서 교섭을 실시하여 금년 9월 5일 일측 내부조사를 마친 승선자 명부 일부(19건)⁶⁾를 외교경로를 통해 제공받았으며, 일본 정부가 관방장관 기자회견⁷⁾ 계기 언급한 바와 같이 여타 명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우리측에 제공⁸⁾하기로 한바, 실무차원에서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또한, 향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동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 등에 활용하고, 특히,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근거자료 부재 등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각하 당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다만,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 결의안 주문 1호에 대하여는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측에 사과를 요청할 경우 오히려

6) 참고자료 “일본 정부가 제공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목록(19건)” 참조

7)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9.6) 계기 언급 내용

- “후생노동성은 향후 동 성이 보유하고 있는 우키시마호 관련 여타 명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제공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임.”

8) (과거 일측의 명부 제공 사례 / 출처: 국가기록원) ▲71년 피징용사망자연명부(1종, 21,692명) ▲91-93년간 군인·군속명부(12종, 346,733명) 및 노동자 명부(3종, 114,822명) ▲07년 군인·군속 공탁금 명부(1종, 120,525명) 등

려 일측의 협조를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 명부 입수를 포함하여 일측의 진상규명 협조를 이끌어낸 이후, 철저한 진상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함.

한편, 결의안은 동 사건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양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 공동조사단 구성은 행정안전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금번 강제동원피해자 명부 입수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차원의 판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이 선행된 후 사죄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측 의견을 반영하여 결의안의 주문에서 “사망한 희생자와 생존자 유가족에 대해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수정안,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
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이 선행된 후 사죄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해 봉환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결의안의 주문에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및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한일 양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문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이 선행된 후 사죄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해 봉환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결의안의 주문에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및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한일 양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문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문

일제의 패망 직후 1945년 8월 24일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수많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 79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진상규명은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일제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강제동원되었던 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불편한 역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고통과 피해를 본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을 위해 협력하고,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체 없이 마련해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주 문 일제의 패망 직후 1945년 8월 24일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수많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 79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진상규명은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u>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일제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강제동원되었고, 당시 일본 해군의 명령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승선한 것인 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u>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주 문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u>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일제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강제동원되었던 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u>

원 안	수 정 안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불편한 역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고통과 피해를 본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u>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u>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u>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u> 2.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한일 양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지체 없이 마련해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을 위해 협력하고,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원안과 같음)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주 문

일제의 패망 직후 1945년 8월 24일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수많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 79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진상규명은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일제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강제동원되었던 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불편한 역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고통과 피해를 본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을 위해 협력하고,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체 없이 마련해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한국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임.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7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남아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이 설치해 놓은 어뢰로 인해 배가 폭발하였고, 약 3,735명의 승선자 중 524명이 숨졌으며, 승선자 명부는 배의 침몰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해 왔음.

그런데, 2014년 승선자가 8천 명이 넘었다는 일본 외무성 문서가 발견되었고, 2016년 우키시마호가 폭탄을 싣고 출항했다는 방위청 문서가 확인되면서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음.

또한, 2024년 3월과 5월에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승선인 명부 15종이 공개되었고, 일본 정부가 승선자 명부를 포함한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자료 약 75종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강제동원피해자였고, 당시 일본 해군의 명령에 의한 강제 승선이었던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동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왔음. 이제라도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는 계기로 삼고자 함.